

▶ 매일 INDEX



5면

전북현대 무폐가도 속 1994 특별노선 '만차 행진'

2025년 7월 16일 수요일 (음 6월 22일) 제3783호

전주매일

www.jjmaeil.com

비수직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호자천변 2길 6번지

대표전화(063)288-9700

'시원한 여름 비'



비가 내리며 선선한 여름날씨가 찾아온 15일 전주시 과학로에서 한 시민이 우산으로 비를 피하며 길을 지나고 있다.

장애인 친화정책 '전국 최고'

전북자치도, 현장 중심 소통행정 바탕 신뢰받는 정책 전환
고용 확대, 의료·문화·인식 개선까지 실질적 변화 실현

전북특별자치도가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통해 전국 최고 수준의 장애인 친화도시로 도약하고 있다. 민원 갈등이 빈번했던 과거와 달리,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 황철호 국장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전북도의 장애인 친화정책이 전국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장애인의 자립과 고용, 돌봄, 문화·의료 접근성까지 폭넓게 개선 하며, 각종 정부 공모사업에서 잇따라 성과를 내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을 도내 장애인단체들의 신뢰로 이어졌으며, 최근 전북시각장애인연합회 등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기도 했다.

전북도는 2025년 3월 도청 1층에 '장애인 전용 상담실'을 개소해 민원 접수를 높이고, 장애 예술작품 36점 등 장애인 생활 25개 품목을 전시하는 복합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도청 내 CJ편의점 입점, 고향 사랑기부제 단례품 연계 등 민간 유통채널과의 협력을 통해 장애인 생활 품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을 통해 60명이 자립에 성공하며 전국 최고 수준의 장애인 복지 정책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미호 기자

본격 시행, 익산시를 중심으로 바우처 수급 장애인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2025년 7월부터는 원광대학교 병원에서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 편의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진료 코디네이터 2명과 수어통역사 1명을 배치해 예약, 진료, 입퇴원 등 전반적인 의료 이용을 도울 예정이다.

도는 2024년부터 '최종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을 시행해 현재 133명이 이용 중이다. 1:1 맞춤형 지원 체계는 도전 행동, 완화와 정서 안정에 기여하고 있으며, 보호자들은 풀봄 부담이 줄었다며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전북도는 장애인단체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이끌어내며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 소통행정 기반 조성'은 전북도 자체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으며, 오는 11월에는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본선 진출도 앞두고 있다.

또한 도청 내 CJ편의점 입점, 고향 사랑기부제 단례품 연계 등 민간 유통채널과의 협력을 통해 장애인 생활 품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을 통해 60명이 자립에 성공하며 전국 최고 수준의 장애인 복지 정책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민호 기자

“강도 높은 LH 개혁 추진”

| 김윤덕 국토부장관 후보



전북 출신인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사진)가 LH(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강조해 눈길을 끌고 있다.

김 후보는 15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시청 문회 준비 사무실에 첫 출근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출근길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이재명 대통령이 LH 개혁의 경우 기준에 해왔던 직원들의 문제를 떠나 매우 구조적이고 판을 바꿀 수 있는 큰 규모 개혁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나는 앞으로 국민과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능동적이

고 공격적으로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그는 원활한 주택공급 정책이나 대책에 대해서는 "3기 신도시 진행과정에 대해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며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방안보다 활용 가능한 여러 부지를 적극 활용해서 노력해 나가는게 좋지 않겠느냐" 입장을 보였다.

이와 함께 "재건축이나 재개발 활성화 용적률을 완화 방향으로 가되 국민과 서민들의 인정적 주택공급을 위해 공공의 이익을 잘 살펴서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윤덕 후보는 지난 11일 전북 특별자치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전북 국회의원·전북자치도·시군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지명했다는 소식을 듣고 "앞으로 공공주택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권희성 기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다변화해야”

전북자치도의회, 긴급 건의안 채택

전용태 도의원 "전국 1100여 면 중 90% 이상

사실상 읍내 하나로마트 외 대체 사용처 없어

농산어촌 주민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을"



이에 대해 전용태 의원은 "이러한 사용처 제한은 대도시에는 일정 부분 타당할 수 있으나, 농산어촌 지역 현실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며, "농촌 고령 주민 다수는 생필품과 농자재를 구매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농협 하나로마트인데, 매출액 제한으로 사용처에서 제외될 경우 사실상 루폰을 쓸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2차 추경예산을 통해 1인당 15만원에서 55만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선불카드 등으로 지급해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회복을 동시에 꾀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소비쿠폰 사용처를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농협은 판매 수익을 지역 농민 지원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회복을 동시에 꾀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소비쿠폰 사용처를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전 의원은 "전국 1,100여 면(面)

중 90% 이상이 사실상 하나로마트 외에는 대체 사용처가 없거나 품목이 매우 제한적"이라며, "농촌 고령자 다수는 읍내 하나로마트 외에는 미행한 이동수단조차 없어 사용처 제한은 곧 쿠폰 실효성 박탈과 같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민 누구나 동등하게 혜택을 누려야 하는데, 절차 농촌 주민들은 슬롯이 없어 종이에 불과해질 판"이라며 "정부는 단순한 일률적 기준이 아니라 지역 실태를 반영한 유연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농협은 농민과 지역경제가 함께 사는 상생조직인 만큼, 대형 상업 대기업과 동일한 자대로 볼 수 없다"며, "행안부는 농촌 주민의 실질적 편의를 외면하지 말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고, 필요시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력해 관련 법령과 시행지침이 현실적으로 보완될 수 있도록 추가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끝으로 전용태 의원은 "농산어촌 주민이 다시는 정책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목소리를 내겠다"며,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2025정읍물빛축제

더 COOL 더 익사이팅 정읍

8.8.(금) ~ 8.10.(일) / 정읍천 어린이 축구장 일원

개막식 8.8.(금) 19:00



댄스 페스티벌



릴보이



우디고차일드



노브레인



EDM 파티



한여름 물난리

청춘 페스타

정읍시